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지원 한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 될 것”

-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개최, ‘27년 5조원 재정지원 방안 확정

- 정부는 8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 (일시/장소) 8.31.(월) 16:00 ~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6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교육감), 민간위원*(15명) 등

* 도시개발, 지방분권, 교육자치 등 각 분야 전문가

-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사항 등 심의*가 이루어져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안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

- 정부는 원활한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담긴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세칙은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간사는 통합특별시지원단장,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기획예산처) >

□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총 5조원 중 4.35조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0.65조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행안부 소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2.85조원 → 기금 내 일반지원 계정으로 출연
산업부 소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5조원 → 기금 내 반도체지원 계정으로 출연

□ 또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정인센티브가 5급 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지방기금 성격)

(계정구분) ① 일반지원 계정: (용도)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② 반도체지원 계정: (용도)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며,

-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원된 재정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맞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7명으로,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통합특별시지원단	책임자	부단장	이승규 (044-200-6040)
		담당자	사무관	윤진욱 (044-200-6049)
<공동>	기획예산처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고병국 (044-214-3191)
<공동>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책임자	과 장	서상우 (044-250-3321)
		담당자	사무관	감영규 (044-205-3559)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5-3706)
<공동>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5-4274)

□ 지원위원회 개요

-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 (구성) 39인(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장 포함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
 - 정부위원(19) : 재경부 등 19개 부처* 장관
 - *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기획처, 국조실, 법제처, 산림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2) : 시장, 교육감
 - 민간위원(17) :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 전문가(임기 2년)
- (심의)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 및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 민간위원 현황(17명)

분야	성명	주요 경력
도시개발	문 인	前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이클 소장
	하주아	하주아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지방분권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주은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교육자치	박현주	조선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산업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에너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장
농수축산 및 해양	김민옥	농업회사법인 (주)토담 대표
	신우철	前 완도군수
	양성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화관광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아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사무처장
	황예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의회 정책보좌관
복지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